

민주-국민의당 예산 넘어 개헌·선거구제·입법 공조 본격화



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 접견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후 청와대에서 제3차 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방한한 바론 외카 나우루 대통령 겸 외교장관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당 원내대표 협력 가능 법안 타진 정책의장·수석부대표 '2+2 협의'도 국민-바른정당 정책연대 영향 주목

내년 예산안의 국회 협상 과정에서 '찰떡 공조'를 보여줬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예산정국 이후 개헌과 선거구제, 입법 문제에 대한 협력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상황은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 정책연대를 공식화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정치권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지난 4일 양당 원내대표 조찬회의에서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합의한 데 이어 5일에는 주요 관심법안 가운데 서로 협력 가능한 법안을 탐색하고 나섰다. 두당의 이런 움직임은 특히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가 이날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합의 문안으로 보이는 문구를 보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히면서 주목받았다.

이 사진에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개헌안 마련과 선거구제 개편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다하며 2018년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확고히 추진할 것을 합의한다. ▲자치단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임을 금지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을 처리한다.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비리에 대한 독립적 전담수사기관 설치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을 처리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합의문이 아니

라 내 카카오톡 대화창에 스스로 메모한 것"이라며 "지방자치법은 국민의당이, 공수처법은 우리 당이 각각 관심 있는 법안이니 안(案)으로 생각해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예산안이 처리된 후 이 방안 등을 토대로 본격적으로 공조 방안을 모색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국민의당과 법안 처리를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경우 검찰개혁을 위한 공수처법과 함께 국정원 개혁법,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을 중요법안으로 뽑은 바 있다. 국민의당은 특별감찰관법·지방자치법·국민체육진흥법, 규제프리존특별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처리가 시급하다고 주장해왔다.

이와 관련, 두 당은 정책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협의'도 최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주당이 62건으로 집계한 공통 공약 법안 처리 문제 등이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나아가 두 당은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논의도 공론화할 방침이다.

문제는 법안과 개헌, 선거구제 등의 문제에 대해 양당의 입장이 다르다는 점이다. 입장차가 클 양당의 공조가 이어지기 힘들 수 있기 때문이다.

선거구제 문제의 경우, 박 원내수석부대표의 문지에는 '비례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추진한다'는 표현이 있었으나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합의된 사안이 아니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점 법안의 경우에도 규제프리존특별법 처리에 대해 민주당은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

문대통령 '2017년 세계 사상가 50인'에

美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 선정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 폴리시 선정하는 세계 사상가 50인에 선정됐다.

청와대는 5일 트위터를 통해 "문 대통령이 포린 폴리시의 2017년 '글로벌 씽커스(Global Thinkers)' 50인 중 한 명으로 선정됐다"며 "올해는 특히 획기적 사상으로 세상을 바꾸는 글로벌 리씽커스(Global ReThinkers)라고 한다"고 밝혔다.

포린 폴리시는 매년 획기적 사상으로 세상을 바꾼 글로벌 씽커스를 선정해왔다. 포린 폴리시는 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순실 게이트' 연루 후 탄핵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북한 김정일의 핵·미사일 위협이라는 3중고 상황 속에서 40%대의 지지율로 당선돼, 75%에 달하는 높은 지지율을 확보한 점에 주목했다고 밝혔다. 특히 "한반도에서 또 다시 전쟁은 안 된다"는 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미국과 북한의 무력 위협에 대한 대안이 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청와대는 "북 핵 문제 등 수많은 난관에도 불구하고 열린 정부를 이끌며 대화와 평화를 강조해온

점이 평가를 받았다"며 "젊은 시절 변호사의 특권을 포기하고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온 부분도 언급됐다"고 밝혔다. 주한 미국 대사관은 이날 트위터에 축하 메시지를 남겨 눈길을 끌기도 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코엑스에서 열린 제54회 무역의날 기념식에 참석, "정부는 현재 약 5000개인 스마트공장을 2022년까지 2만개로 확대하겠다"며 "스마트공장 확대는 중소·제조 기업 생산성을 높여 수출 기업이 굳이 해외로 나가지 않아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마트공장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수출 산업 고도화 방안 중 하나다.

문 대통령은 이어 "기존 주력 수출 산업에 인공지능(AI) 같은 혁신 기술을 적용해 경쟁력과 부가가치를 높여겠다"며 "차세대 반도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등 고부가가치 신산업을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적극 육성하고 농업도 스마트팜을 통해 혁신 창업과 수출 산업으로 도약시키겠다"고 말했다. 또 "중소·중견기업들이 수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기업 맞춤형 수출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바이어 발굴부터 계약, 납품까지 전 과정을 돕겠다"고 강조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광주군공항 이전지역 4500억 이상 지원

소음완충지역에 '주민 수익' 축구장 500개 규모 태양광발전단지

광주시 '통 큰 지원책' 발표

광주 보다 1.8배 크게 건설 소음·고도제한 피해 최소화

광주군공항이 이전되면 이전지 주변지역에 4500억원 이상이 지원된다. 또 군공항 바로 옆에 조성되는 축구장 500개 규모의 소음완충지역에는 대규모 태양광발전단지를 만들어 수익을 주민에게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광주군공항 이전 문제가 지역 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어 '통 큰 지원책'이 준비되고 있는 셈이다.

5일 광주시가 발표한 '광주 군공항 이전 설명자료'에 따르면 이전 주변지역 지원사업 가능 금액은 4500억원 이상으로 파악됐다. 현재 광주군공항 중전부지 재산가액에서 군공항이전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제외한 4500억원을 모두 이전 주변지역 지원에 쓰게 된다.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대구와 수원 등 국내 지자체 중에서 이전지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는 광주군공항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구 등지에서는 지원사업비 증액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 새로 들어설 군공항시설은 11.7㎢(353만평) 규모로 계획됐고, 소음완충지역은 3.6㎢(110만평)에 달하는데 이는 축구장 500개 이상 규모다.

특히 소음완충지역에는 지역주민의 동의를 통해 대규모 태양광 발전단지를 조성, 수익을 주민에게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군공항 이전 과정에서 일시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이전 주변 지역 주민을 위한 소득원을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또 상·하수도, 마을도로 정비, 농업용수 공급시설 정비 및 확충, 문화공원,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지역커뮤니티센터 등도 설치된다.

이 밖에도 도서관 등 학교시설 환경개선, 마을학교 등 배움터 조성, 주민 역량 프로그램 마련, 영농시설 확충, 로컬푸드 매장 및 유통시설 조성, 국방산업 유치 등의 지원사업도 곁들여진다.

소음 최소화를 위해 소음피해 예상지역의 부지를 추가 매입하고, 예비 이전 후보지로 선정되더라도 추후 주민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군공항 이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근본적으로 공항 소음을 줄이기 위한 해소 방안도 마련된다. 새로 건설하는 군공항(15.3㎢·463만평)은 광주군공항(8.2㎢·248만평)보다 1.8배 크게 건설해 소음과 고도제한 피해를 줄이고 도심과 주민이 적은 곳에 건설될 예정이다.

현재 군공항이전 후보지는 국방부장관이 군사작전 및 군 공항 입지의 적합성 등을 충족하는 지역을 관계 자치단체장과 협의 후 예비이전후보지를 선정하게 된다. 또 예비이전후보지 중 이전부지선정위원회(위원장 국방부장관) 심의를 거쳐 이전후보지를 선정하게 된다.

이를 통해 이전후보지 중 해당 지자체가 주민투표 결과를 반영해 유치 신청을 하면 이전부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 지역을 결정하게 된다.

광주시는 현재 전남 일부 지역을 돌며 지자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이 같은 안을 설명하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이 문 우 제 제 리 제 제 는 가 게 게

교육자치 광산구
제1회 교육문화예술축제

2017. 12. 14. (목) - 16. (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창조원·컨퍼런스홀

개막 청소년콘서트 12. 14. (목) 14:00~16:00
폐막 누구나 학교 선포식 12. 16. (토) 17:00~18:00

전시·체험 살아남은 자들의 슬픔에서 살아갈 자들의 기쁨으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창조원 02층, 문화정보의 컨퍼런스홀 일영
주요 참여작가·이영, 최성민, 홍성민, 고근호, 주홍, 이영홍

모든 사람은 예술가다 생산시민
문화예술생태지 결과물

문화예술이 사회를 바꾼다 행동시민
예술동력 프로젝트 전시물

참조력 없이 진보없다 공공시민
배움의 상상력 생산물 결과물

우리가 역사의 증인이다 민주시민
문화예술로 만나는 5·18 작품들

포럼·워크숍 배움의 공간에 배움의 다양성을 담다

12. 15. (금) 포럼 **영동한 학교** 10:00~15:30
패널: 김태은 교육기자 김해자 교사 안애경 마트미디어 이소진 건축사 원동학교 참여 학생들 조·홍·고
●차 일반인 대상 10:00~12:00 ●차 청소년 대상 13:30~15:30

워크숍 **그림책 학교 '홍성담 작가의 작품이야기'** 10:00~12:00

12. 16. (토) 워크숍 **미래교실네트워크 학습공개** 10:00~13:00
포럼 **민주학교** 15:00~17:00
패널: 임애연 농림축산식품부 대표 권덕홍 시흥시(대) 부회장 이성원 미래교실네트워크 이사 서우철 공익문화재단

주관 **광산구** **국회의원 유은혜** **SIGNmedia** 협력 **광주광역시교육청**

후원 **스.스.스** **kbc 광주방송** **광주일보** **HOUSING** **GLOBEPOINT** **SAMSUNG** **연세대학교**